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합식 이틀째인 11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앞바다에서 윤곡이함(DDG-9977 천600t)을 선두로 우리나라 해군 함정들과 P-3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들이 대모를 맞춰 기동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전쟁거점 아닌 평화거점으로”

文대통령, 해군 국제관합식 참석
강정마을 주민 만나 직접 위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합식’에 참석, 연설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합식은 국가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사열 의식을 말한다. 각국 해군이 함께하는 국제관합식은 참가국 간 우의를 다지는 세계 해군의 축제로 불린다.

이날 관합식에는 12개국에서 19척의 외국 군함을 포함해 40척의 함정과 24대의 항공기가 참가했고, 46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사에 대해 “해군력 증진을 통해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와 번영 이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국방력”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해군력은 개방·통상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대한민국 해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우리는 바다를 통해 새로운 땅을 만나고 이웃을 만났으며 우리의 영역을 지구 전체로 확장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200여 개의 항만에 연간 1억 9000만 개의 컨테이너가 물자를싣고 오가고 우리나라 라도 무역의 99.8%가 바다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다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바다에서 경쟁하고 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합식에 참석해 ‘좌승함(座乘艦)’인 상륙함 ‘일출봉함’ 함상에서 해상 사열을 지켜보며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존한다”며 “바다는 인류 모두의 공동자산”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국제관합식에 함께 하는 이유는 바다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희망이자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터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일출봉함’에 승선, 함상에서 진행됐다. 이후 온 관합식에 참가한 40척의 국내외 해군 함정으로부터 해상사열도 받았다.

일출봉함에는 조선수군의 대장기인 ‘수자기(帥子旗)’가 게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사가 사용한 대장기를 계양함으로써 해양강국의 의지를 표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참여단이 탑승한 시승함인 ‘독도함’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은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추정되는 ‘데니 태극기’ 모양의 태극기를 게양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관합식 공식 행사를 마친 뒤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몸과 마음이 다친 주민들을 위로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군 등과 갈등을 겪어왔다.

청와대는 이번 관합식이 제주에서 열린 것도 강정마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제주 국제관합식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해상사열이 열리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한 도민이 제주해군기지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원전 대신 태양광? 산지 9배 훼손

산업부 국감

탈원전 정책 놓고 여야 갑론을박
與 “세계적 추세… 국민 안전 고려”
野 “국토 파괴… 국가 경쟁력 악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며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악화시키고 있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했다.

위성곤 의원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고에서 구멍이 발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원자력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성,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 발전이 정지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선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

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원전 1기 용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축구장 약 1300개 넓이에 태양광판을 깔아야 한다”며 “이 좁은 국토를 다 태양광으로 덮고 풍력을 설치해야 할 판”이라고 가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관은 또 “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해나가겠다”라고도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10兆 출자 석유공, 쥐꼬리 배당

〈배당률 2.8%〉

여기구 의원 “국민혈세 탕진 우려”

올해 부채비율도 939%로 악화

역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약 10조 원의 금액을 출자했지만 배당률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여기구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한국석유공사 정부출자금 및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1979년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총 10조 472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4.1%

에 해당하는 5조 6619억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집중 출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정부출자금에 대해 배당한 금액은 2935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의 2.8%에 불과했다.

여기구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로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어 정부의 출자금 회수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는 고스란히 국민혈세 탕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석유공사의 재무상황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12년 167.5%였던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93.9%에 이른다.

어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탕진한 방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고교 무상교육 내년 조기 도입 ‘공방’

교육부 국감

“유은혜 인정 못해” 야당 정회 소동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유 부총리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10여분 지연됐다가 개회했으나, 유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내년 조기 도입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여야는 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던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유 부총리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10여분 지연됐다가 개회했으나, 유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내년 조기 도입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여야는 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후 속개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고교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 발표 경위를 문제삼았다. 김현아 자



유 부총리의 취임 과정을 문제 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

/연합뉴스

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예정했는데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면서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결단을 하는 과정에 교육부와 협의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국회 원내대표간 예산 협의를 하지도 않고 장관이 시행하겠다고 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교육부가 도입 시기를 당기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일부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용수 기자 hys@

ID 불법거래 폭증하는데 방통위, 모니터링 완화?

온라인상 아이디 불법거래가 만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이 지난해 8956 건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4만 1503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방통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온라인 상 불법거래 게시물을 집중 단속을 했다. 그러나 집중 단속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1회 모니터링을 주 2회로 줄이는 등 오히려 불법거래 모니터링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의원은 “드루킹 사건 등에서 불법 도용된 아이디를 쉽게 구하고 이를 댓글 조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반대로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드루킹 사건 등에서 불법 도용된 아이디를 쉽게 구하고 이를 댓글 조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반대로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